

‘갈수록 태산’.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우리의 인내력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미사일은 우리가 타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이기에 우리로서 걱정할 게 없다는 논리도 솔솔 일고 있는 모양새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호재로 여기는 무리가 있다는 어불성설과 같은 트집도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혈맹인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북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직전 미국에 북·미 평화협정 관련 비공식 논의를 제안했다는 소식은 그들의 전형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연속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그들의 일상화된 모습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철 때만 불어오는 북풍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에 휘말릴 국민이 있을까. 선거용이라고 단정하는 무리가 되레 선거에 이용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 강원포럼

박용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부의장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관문점 도끼만행과 아웅산 테러,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KAL기 폭파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숱한 적화통일의 야욕에도 우리는 인내했다. 그 인내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 북핵에도 중단 없는 평화통일 노력

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가 답을 대신한다. 최근 잇따른 북핵 위기가 자못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고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의 소명이자 책임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우리의 인내력이 바닥났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교육지책이다. 1990년대 수많은 아사자가 생길 정도로 처절한 고난

의 행군을 벌인 북한은 당시에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으로 전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명백히 해소될 때 비로소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인들의 고통은 심분이 해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북한의 핵 무장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평화통일이라는 대명제가 있기에 힘을 얻는 것

이다. 평화통일의 기본은 북한이 핵 카드를 포기했을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여전히 북한이, 김정은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평화통일은 요원한 숙제로만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무장은 바로 이러한 적화통일의 원동력이 된다. 이 같은 야욕을 분쇄할 때 적화통일의 헛된 욕망은 사그라질 것이고 그래야만 평화통일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제 길을 가기 위해 숨을 고를 뿐이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 우려

#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악재 잇따라

강원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분할발주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9로, 전달보다 13p 하락했다.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2010년 8월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내 건설경기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2152건에 1조2984억원이다.

동계 관련 공사 발주가 가장 활발

## 동계 특수 완료·대형 호재 전무 분할발주 활성화 등 대책 시급

했던 2010년 1조5459억원과 비교하면 2475억원이 줄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공사 발주는 모두 완료됐고 진입도로도 마무리단계로 동계 특수가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의 SOC 사업 축소도 도내 건설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배정한 올해 SOC 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6조원 보다 9%정도 줄었다.

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대형 건설 호재가 없어 불황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도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내 공장 신·증축을 가능케하고 서울과 경기 일원

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건설 기회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도내 건설사들이 자칫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내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도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분할발주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800억원 규모의 춘천신청사 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어느 업체가 수주할 지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옥천동청사 철거는 내달부터 이뤄지고 신축공사는 6월 시작돼 201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시청사는 지하2층~지상8층, 시의회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며 전체 연면적은 3만9500여㎡로 총 공사비는 800억원이다.

춘천시청사 신축 공사는 300억원

## 800억원 춘천신청사 입찰 임박

### 이달 말 공고·도내 지자체 첫 중심제 적용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가 도내에서 지자체로는 처음 적용되는 공사다.

이르면 이달 말 입찰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관심은 어느 업체가 춘천 시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하느냐에 쏠려있다.

현재까지 춘천시가 전국 경쟁 입

찰을 통해 1군 업체가 도내 업체와 컨소시엄(지역의무공동도급 49%)을 구성할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외지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중심제는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도입됐지만 시

공경험이 많은 중·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춘천시청사 신축공사를 제도적 장치 안에서 지역 업체들이 더 많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춘천시청사 신축 공사는 도내 지자체가 발주하는 첫 중심제 대상"이라며 "춘천시청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공공시설 공사비 소폭 오른다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건축·토목 0.09% 상승 전망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등 각종 요율이 지난해 대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공사비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여건도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7일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비율 조정내용을 보면, 간접노무비 적용률은 지난해 6.0~11.6%에서 올해는 5.9~11.9%로 조정됐다. 공정별로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0.21%포인트와 0.12%포인트 올랐고, 조경공사도 0.3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다만 산업환경공사는 0.17%포인트 내렸다.

기타경비의 적용률은 지난해 5.2~7.4%에서 올해 5.0~7.7%로 변경됐다. 건축과 산업환경은 각각 0.06%포인트와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률 조정현황

	2015년 적용률(%)	2016년 적용률(%)
간접노무비	6.0~11.6	5.9~11.9
기타경비	5.2~7.4	5.0~7.7
일반관리비	4.4~6.0	4.5~6.0
이윤	9~15	9~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40~0.0264	0.0140~0.0264

0.01%포인트 올랐으나 토목과 조경은 각각 0.04%포인트와 0.2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적용률이 4.4~6.0%에서 4.5~6.0%로 상향 조정되면서 0.05%포인트(300억원 미만은 동일) 올랐다.

이윤(9~15%)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률(0.0140~0.0264%)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간접노무비는 전년 대비 약 2.3%로 오르고 일반관리비 역시 0.9% 상승할 전망이다 가운데, 기타경비만 평균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및 토목공사의 경우 약 0.09% 오

르고 조경공사와 산업환경설비공사도 각각 0.08%와 0.15%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조달청은 내다봤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제비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도 이 같은 각종 제비율 상향조정과 더불어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확대 등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되는 항목별 요율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을 비롯,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공종별 및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 적용된다.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 설계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도 활용할 수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 종평제 ‘입찰가격 보장’ 藥될까, 毒될까

종합평가 낙찰제(이하 종평제)가 담핑수수방지를 위해 보장키로 한 입찰가격 평가 항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행정자치부가 시행시기를 오는 5월로 유예해 그 이전에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조달청의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준용해야 한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할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기준 마련 없이 오는 5월 입찰공고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 예가대비 77%미만 투찰 '-5점'

### 담핑수수방지 목적이지만 고정비 비중 높을 경우 오히려 적자시공 가능성

이는 행자부가 지난해 설명회에서 제시한 초안에 비해 세부기준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입찰가격 평가에서 담핑수수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77%미만으로 투찰하면 5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고정비 항목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오히려

적자 시공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공사규모에 따라 입찰가격 배점은 35, 40, 45점으로 종평제의 수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적정 낙찰률을 보장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는 표준시장단가와 법정경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건설공사가 많은데 예가 대비 77%에 묶여 적자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배치기술자 등의 문제도 종심제와 마찬가지로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자부가 시행시기를 오는 5월로 유예함에 따라 그 이전에 건설공사를 발

주해야 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조달청의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추정금액 815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1공구)를 오는 5월 이전에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달청 종심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종평제는 행자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별도로 수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도 “아직 사업부서에서 오는 5월 이전 발주를 의뢰한 건설공사는 없는 상태”라며 “종평제는 시범사업을 치르지 않아 5월 이후 시행해봐야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